

靑 “지금은 부동산 과열... 불 끌 때”

김수현 수석 “참여정부 혹독한 경험 바탕으로 이번 대책 만들어... 남은 5년 부동산 안정시킬 시간 있다”

1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을 끄면 적절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정부는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아권에서는 이 발표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부분을 언급하면서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다.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패하는 과정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 그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성찰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면서 “참여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했다. 전임 김대중 정부 후반부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IMF

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안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이었다”면서 “그때 준거가 노태우 정부 당시 정책들이었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워낙 빨리 성장해 주택 수요가 늘었고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늘린다는 공식이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 가장 강력했던 수준을 참고삼아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다”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으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틀도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지난 3~4년간 바로 그 ‘초이노믹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한다”면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당 전정배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3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통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피면서 잘 준비해

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현 정부는 출범 식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와 방식으로 정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자신했다. /뉴시스

“사드 임시배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개 진행”

국방부는 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것과 임시배치가 시작되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가 2기 사드발사대 임시배치 할 때 이전 배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배치 지역 주민 설득과 관련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께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바른정당에 현안보고를 진행하며,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잔여 발사대가 배치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말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한미 간 협의 하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기 배치된 장비에 대한 임시보안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외교부 “美 패키지 제재법, 북한 태도 변화 기대”

외교부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법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효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간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은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권한을 준 거로 알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5일 출국한다. /뉴시스

정의용 “한반도 전쟁 발발 않을 것... 美측 확인”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미국 측 여러 채널로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예방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정부와 미국

의 조치 현황, 주요국 반응 등을 보고했다. 북미간 전쟁 발발 가능성,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

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쟁 위기 상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당장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측) 여러 채널로 확인하고 있다는 정 실장의 보고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채널이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중심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 실장은) 지금 우리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 카운터 파트너를 갖고 거의 매일 긴밀하게 토론했고 있다. 정 실장은 맥마스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틸러슨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주장은 ‘동시에 중국과도 그 정도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정 실장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분들의 대화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당장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 실장의 보고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중미(중국·미국)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엄밀하고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국회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정 실장은 신중하게 접근하

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울러 당내 사드 배치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얼마 전 불가피한 선택임을 얘기했고, 정 실장이 고맙다고 한 걸 보면 전체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지만 그분들도 전체적으로는 현재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로드맵과 사드 임시배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수 2野, 안철수 정치체재에 공식논평 ‘자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당권 도전 선언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하길 기대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른 당에서 대표로 자유롭게 출마하는 것인데 논평을 하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안 전 대표 본인의 결정이고, 국민의당 당원들이 표결할 일”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공식 논평을 하지 않은 채 사견임을 전제로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반성문에 링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도전장을 낸 것은 국민 기망 행위다”라며 “정치를 회화시키는 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들의 매서운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매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